데스크 시각

'비단 할아버지, 거적 자손' 한탄 언제까지…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1894년 10월 2차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북상하다 12월초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관군과 전투를 치르지만 화력의 열세로 패배한다. 남으로 후퇴하던 이들은 원평 구미란에서 재집결해 12월 21일 다시 일전을 펼쳤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산 121. 구미마을 뒷산자락에 '원평 구미란 전투 동학농민 무덤군'이 자리하고 있다. 묘역은 이때 전사한 무명 농민군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관군 기록에는 37명이 전사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행히 마을에서 묘역으로 가는 길은 둘레길로 정비돼 있었다. 묘역은 초라했다. 소나무 숲 아래 작은 봉분들이 방치돼 있었고, 곳곳에서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묘역은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농민군들의 이상을 담았던 '원평 집강소'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0여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이 40여 년째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고 한다.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장흥 공설 공원묘지' 4묘역. 1895년 1월 9~10일(음력 12월 14~15일) 장흥 석대들(국가사적 498호) 전투에서 순절한 농민군들이 모셔진 곳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이 세워진 장흥읍 충열리 일원에 1989년 공설운동장을 만들 때 나온 유해 1699기를 이장했다. 우금치·원평 구미란·태인 전투에서 잇따라 패퇴한 농민군과 장흥지역 농민군 등 3만여 명은 일본군·관군과 석대들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으나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나마 묘역 앞에 세워진 '동학군상'과 '1894' 조형물(작품제작 꿈두레 설치미술팀)이 농민군의 원혼을 달래주는 듯하다. 장흥군 관산읍 남송리 도로변에도 무명 농민군들의 묘역이 있다. 석대들 전투 하루 뒤 벌어진 '옥산촌 전투'에서 희생된 농민군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전해온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맞아

1894~1895년 반봉건·반외세의 깃발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30주년을 맞았다. 광주일보 자매지(誌) '월간 예향' 특집으로 동학을 준비하면서 고창과 김제, 장흥 등지에 산재한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관군과 싸워 첫 승리를 거둔 황토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되는 등 많은 전적지·유적지에는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있다. 하지만 2차 봉기 동학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무명 농민군들이 묻혀있는 묘역을 재정비하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월 19일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예동마을~말목장터에서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열렸다. 1894년 2월 15일(음력 1월 10일) 전봉준·김도삼·정종혁을 중심으로 고부민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첫 횃불을 들었다. 앞서 한 달 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대뫼마을 송두호 집에서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며 준비해온 거사였다. 이날 빗속에서 예동마을을 출발해 이평면사무소 앞 말목장터 감나무에 이르는 재현 행렬을 지켜보며 주민들의 선조에 대한 자긍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명 동학농민군들의 묘소로 전해오는 정읍과 장흥지역을 돌아보며 비애감에 사로잡혔다. 동학농민군들이 일본군·관군과 전투를 벌인 전적지는 여러 곳이 있지만, 전사한 농민군들을 모신 묘역은 원평 구미란과 장흥 공설 공원묘지, 관산읍 남송리 등지에 불과하다. 1894년 6월 11일 '전주 화약' 후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은 10월 8일(음력 9월 10일) 전북 삼례에서 모여 2차 봉기한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7월 23일)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전봉준은 심문조서(공초)에서 "다시 기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는 물음에 이를 명백하게 밝혔다.

"그 후에 들은즉 귀국(일본)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구의 말도 민간에게 공포함이 없고 또 알리는 글(격서)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의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로 초야의 사민들이 충군애국지심으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군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1차 묻고자 함이었다."

무명 동학농민군 묘역 재정비해야

그럼에도 2차 봉기 동학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와 달리 수많은 농민군들은 이름을, 묏자리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 흔히 '비단 할아버지, 거적 자손'이라 말한다. 멸문지화를 간신히 피한 동학 후손들은 선조에 대한 긍지 하나로 긴긴 세월을 버텨왔다. 무명 동학농민군들의 묘역을 방치하는 것은 후손된 도리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행적이 분명한 동학 지도자들은 서훈을 하고, 망실돼가는 묘역은 재정비해 성역화해야 할 것이다. 그때로부터 130년이 흐른 현재, 황토에 배인 무명 동학농민군들의 피울음소리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은펜칼럼

광주형 '복합쇼핑몰 3종 세트' 게임 관전평

박홍근
건축사

평생 경제학을 공부하고 게임이론을 전공한 한순구 교수는 "게임이론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략'과 '선택'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선택의 갈림길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펼쳐놓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 분야"라 했다. 필자 또한 평생 건축관련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건축사로서 이런 관점에서 지역 주요 개발사업을 바라본다.

개발사업자(디벨로퍼)는 '개발 게임'의 프로들이다. 그들이 일명 '광주형 복합쇼핑몰 3종 세트'라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전남·일신방직 터의 '더 현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개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상대는 광주광역시다. 행정의 지원군은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지만 아쉬움 또한 많다. 향유해야 할 시민이나 시민사회 전문가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 게임장 밖 벤치에 앉아 관전평을 해본다.

첫 번째,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은 될 것이다. 신세계와 금호그룹 측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패(覇)다. 신세계는 금호그룹 소유의 광천터미널 쪽으로 위치 변경을 통해 '꿩 먹고 알 먹고'다. 마트와 백화점 영업을 하면서 더 좋은 위치에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광주시는 이 게임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터미널 환경 개선과 도시경관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독특한 건축 디자인이 나오게 해야 한다. 공공이익을 실현할 혁신적이고 특색있는 콘텐츠가 들어서야 한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축소판이나 동대구터미널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승'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남·일신방직 터는 그런대로 개발될 것이다. 디벨로퍼의 이익 극대화 선에서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와 호텔 유치, 땅장사를 한 이익금 중 약 600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받는다. 그 외는 사업자의 아파트 장사와 부대시설, 일부 공원이 조성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약간 난이도 있는 게임이지만 아쉬운 무승부에 불과하다.

무승부를 '승'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꿀잼도시가 될 콘텐츠, 공간복지를 실현할 여유 공간, 약 3만평이 넘을 아파트 부대 상가의 활용 방안 모색, 협소한 공원의 확장과 분산된 시설의 입체적 연결, 현상설계 원안대로 공중광장 조성 등등 이곳만의 색다른 도심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래를 꿈꾸고 준비할 공간인 '도시미래관'을 꾸며 '광주 100년'을 지금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 정도면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가다가 멈출 수 있다. 약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는가? 필자의 관전평은 '없다'이다. 배후 인구 부족, 천혜의 관광자원 전무, 앞서 달리는 두 곳의 복합쇼핑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세계 측에서 2개 사업을 동시에 끝까지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계약금 86억원과 보증증권으로 116억원을 투입했다고 마무리까지 갈지 의문이기에, 게임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 개발 게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특별히 법과 규정에 '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그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면 된다. 포기를 위한 출구전략을 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書生)적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란 어록을 남겼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말을 되새겨 봐야 한다. 탁상행정 정도의 문제의식과 희망고문 수준의 현실감각으로는 택도 없다. 이상을 꿈꾸며 현실에 기반한 탁월한 문제의식과 냉철한 현실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 겨우 2승 1무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이익 있는 '무승부'다. 행정책임자는 사업을 '사명'으로 여기고 더 치열하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 고

인구문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결과 청년 3명 중 1명(36.4%) 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남 40.9%, 여 26.4%)'이 1위로 꼽혔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채 1명이 안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더해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및 이민자의 유입 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이 때문이다. 출산 장려 등 1차원적인 정책으로는 붕괴하는 인구구조를 감당할 수 없기에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유입 정책을 국가 존속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3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를 차지한다. 한 국가의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국제기구 등에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진입 문턱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전통적 이민 수용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각 부처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 적지않은 불편과 비효율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의 숙련 인력이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원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회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외국인 및 이민자가 인구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명받으며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 1월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을 촉구하며 이민청 설립 및 전남도 이민청 유치를 위한 기반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역비자제도는 광역지자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아 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지자체 주도형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흔히 쓰인 하향식이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언이다. 지방으로의 적절한 권한 이양을 통해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현실성 높은 정책들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파해 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 및 이민자 만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온전한 답은 아니기에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또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남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게는 17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총 43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정부에 제안해 입법을 이끈 바 있다. 월 1만원에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주택' 지원, 권역별 청년비전센터 설립 등 중·장기적인 정책도 실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저출산과 정주 여건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부터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민자 유입을 위한 유입과 체류, 정착의 선순환 구조의 확립까지 복합적 정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 인구문제의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의 과정이 결국 정책의 견고함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획기적 선례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社說

'선당후사' 임종석, 민주당 공천 안정 이끌었다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사천(私薦) 논란으로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당 잔류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희망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 전 실장의 거취를 놓고 한때 분당 위기설까지 돌았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탈당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내홍이 잦아들게 됐다.

임 전 실장은 컷오프 이후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진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홍영표 의원 등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탈당을 예고한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의 핵심인 임 전 실장의 거취 결정이 민주당 공천 내홍의 뇌관이 됐다. 그 사이 호남에서 국면 전환을 노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임 전 실장을 만나 영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임 전 실장은 호남과 민주당을 외면하지 않았다.

새로운미래측에서는 임 전 실장이 탈당을 결정했다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탈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터라 거취 문제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했고 전대협 의장을 지낸 386 운동권의 상징 인물이란 점에서 애초부터 민주당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2008년 총선의 '친박 연대'처럼 민주당 친문 탈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연대' 참여를 고심했을 가능성은 있다.

어찌됐건 호남과 친문을 상징하는 임 전 실장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개인의 입지를 포기하는 '선당후사'를 실천함으로써 민주당 공천이 안정을 찾게 된 점은 평가할만하다. 민주당 공천도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 임 전 실장의 잔류를 계기로 원 팀 정신을 살려 정권 심판이란 목표를 성취하는데 힘을 모으고 텃밭인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세를 되돌리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파트 넘쳐나는데 정부가 나서 물량 쏟아내나

정부가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외곽에 1만 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조성 계획을 강행하면서 지역 주택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춘데다 앞으로 10년간 14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거대 아파트 단지 조성은 미분양 발생, 신·구 아파트 동시 거래 절벽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2월, 2030년까지 광주 산정지구 내에 1만 3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자로 광산구 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 대상지인 산정·장수동 일대 3.49㎢ 2773 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광주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주택보급률,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10년간 14만 세대 신축 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04.5%로 전국 평균(102%) 보다 높고 2030년이면 119.8%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주택 시장은 현재 역대급 침체에 빠져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 파격 할인판매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심 노후화를 방치한 채 도심 외곽에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신축될 경우 심각한 신·구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대규모 아파트 신축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광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과도 맞지 않다.

국토부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광주시의 취소 요청과 공공주택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개발 등 대안에 귀 기울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모님'은 가라

'이모님'이라는 호칭이 친족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쯤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식당 여주인에게 학생들이 친밀함을 표현한 것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아줌마'를 대체한 배려 차원에서 나온 용어인데, 아줌마가 부모와 같은 항렬 친족 여성에게 사용하던 '아자미'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조금은 어색하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개념에서 '이모~'가 대중에 안착한 데는 한국 사회의 모계화가 한몫했다. 이른바 X세대(1960년대와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결혼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맞벌이가 보편화하면서 양육이 큰 문제가 됐다. 젊은 엄마는 시부모보다는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게 마음 편했다. 그래서 친정 엄마를 중심으로 자매가 가까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모를 고모보다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요즘은 맞벌이가 일상화하면서 육아나 가사가 힘들어 일명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세대가 훨씬 많아졌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고용부의 인증을 받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겨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이르면 6월에는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오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서울 전역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데 여기서 육아나 가사를 돕는 이들의 호칭을 두고 논란이 되는 모양이다. 공식적으로는 '가사관리사'라고 칭하고 '관리사님'으로 불러야 하지만, 보통은 정작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이모님이나 여사님으로 불리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선호도 조사에 따라 이를 대신해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을 쓰자고 제안하고, 호칭은 '관리사님'을 권고했지만 입에 익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생기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모님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도 이모님 대신 '저기요~'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모님은 보내고 관리사님이라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